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2/ 6 통권 165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판시는 없다(1)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해당 이익별 합산해 1억원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함
-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의 개인주주 자신에게는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p.14)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실질 증여 · 증여의제인데 과세 안되는 기준금액 등〉

개념구분(상증법)	증여세 과세 제외이유, 범위, 규정 등
금전무상대출 (41조의 4)	금전제공은 증여, 금전무상대출이익도 증여(단 1년 기준 해당 이자 1천만원까지는 제외 : 연 대여금 217,390,000×연 4.6% = 1천만원×10년 = 1억 내 : 상속 · 증여 시행령 제31조의4)
특정법인거래 (45조의5)	지배주주 등이 소유하는 특정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이익분여 시 이익×지분비율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함(1억 미만 과세제외, 무상금전대여는 대여기간 통산하여 이자 차액의 증여해당액 1억 이상인지 여부 판단함 : 상속 ·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5 제5항)
재산취득 추정 (45조)	취득자의 직업, 성별, 연령별 재산의 자력 취득부족차액은 증여(취득가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입증시 증여추정 : 상속 ·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증여세 비과세 46조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가입 소액주주의 주식취득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이(상속 · 증여세법 제46조제2호)
	사내근로 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법상 우리사주조합 등이 수증받은 재산(상속 ·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생활 · 교육비 등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이재민구호품, 학자금, 축하, 부의금, 불우이웃돕기(상속 ·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혼수용품 결혼에 통상 필요한 금품(상속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국민주택취득 보조 무주택근로자의 국민주택취득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 5%(취득) 10%(전세) 보조금
	국가 · 지자체 국가 등에게서 받은 자산, 국가 · 지자체가 증여받는 재산
	장애인보험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연간 4천만원 한도)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52호 / 주간 49호

2023. 12. 6.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증여·증여의제인데 과세 안되는 기준금액 등	표지
긴급시사해설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해당이익별 합산해 1억원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함	2
CEO에세이	판시는 없다(1)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국내용역에 대한 해외업체 및 해외업체의 국내법인과 계약시 부가세처리 여부 - 일확천금행제 관련하여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재화의 납품은 국내 업체로 하나 대금은 해외법인에서 수금하는 거래의 경우 - 보험료 환급	6 7
눈에맞는절세미인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8
매일절세재무요점	- 2025년 시행으로 늦춰진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 인하	11 12
직장인Survival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마라	13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제과-58, 2023.01.27) -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059, 2023.05.30)	14 15
세정뉴스와해설	국세청, 중부세 50만명에 4조7천억 고지...작년보다 78만명2조원 감소	16
마케팅 Tax consulting	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의 개인주주 자신에게는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14
세무정보	-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채납자 집중 추적	17 34
회계정보	-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해당이익별 합산해 1억원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2262)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참고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1715, 2015.09.16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6.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령 제31조의10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시는 없다(1)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많은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에서는 ‘판시’(關係)가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또 중국인들도 판시를 강조한다. 그래서 서로 그 판시를 만들고 굳건히 하기 위해 술과 쾌락의 접대를 주고받는다.

중국과 수교 이래 대체로 한국기업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미래의 거대시장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생산기지는 필요한 일이었다. 관광도 겸사겸사 중국의 합작파트너도 물색하고 또 공장부지와 조건을 탐색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이 중국입장에서는 해외 자본유치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수많은 중국인들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또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서 중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일이다. 기왕에 시장개방을 통해 중국이 세계시장에 등장하는데는 아주 긴요하다. 그래서 해외 기업인들의 중국방문은 관광이건 산업시찰이건 공장이건 조사이건 무조건 환영할 입장이다.

그래서 공장허가를 맡은 중국관료이건 민간 합작파트너이건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기업가들을 극진히 모실 조건들이 넘쳐나 있었다. 특히 중국관료들 입장에서는 해외기업의 유치가 그들의 평가와 보상에 반영되는 실정이고 보면 광적 접대도 불사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한국이건 중국이건 관료의 속성상 돈 쓰는 일이 주인 없는(?)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기업의 임직원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해외기업유치를 위해 돈을 펄펄 써도 누가 딱히 말하지 않는 풍토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다. 오히려 핑계거리로 떼지어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같았다. 설사 유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언필칭 ‘중국식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행착오를 서로 눈감아 줄 일이었다. 원래 중국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지극히 즐기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중국은 정말 먹는 게 무지무지하게 발달한 나라다. 원숭이 골에서 곰발바닥까지 음식이 안되는 게 없다. 서양사람들이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약간 비꼰 말이 생각난다. “중국사람들은 먹어서 망하고 한국사람들은 입고 허세부려서 망하고 일본사람들은 돈 안 써서 망한다.”

IMF이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콧대 높은 줄 몰랐고 또 간이 부었었다. 꿀볼

견이 많았다. 약간 증대한 소득격차와 중국의 싼 물가 때문에 한국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술과 쾌락을 싸게 살 수 있었다. 국민 모시듯 발벗고 나서는 중국관료들과 합작 파트너들의 접대를 판시의 증대로 믿고 싶었다. 먹고 마시고 싼값에 쾌락을 즐겼다. 공장이전을 곧 할듯하면서 평평 큰소리치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녔다. 허풍은 결국 거짓말이 되곤 했다. 직업상 같이 다니면서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보아왔다. 한국에서는 꽤 그럴싸한 위치에 있는 지도급 인사가 중국의 술집에서 10달러로 호스테스를 농락하던 일은 지금도 역겹다. 자기 구두에 위스키를 따르고 그것을 그녀에게 마시라는 것이다. 그러면 10달러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졸렬하고 치졸한 어글리 코리언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접대를 주고받는 중국인들과 판시를 쌓았다고 착각했다. 판시를 빙자하여 한국인들의 치졸함과 졸렬함을 중국인들에게 차곡차곡 인식시켜왔다. 그러다가 톡톡히 댓가를 치르기도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24일 (금)	11월 27일 (월)	11월 28일 (화)	11월 29일 (수)	11월 30일 (목)
미	달	러	(USD)	1298.70	1302.10	1304.70	1294.00	1289.00
일	본	엔	(JPY)	868.26	870.82	878.08	878.27	877.29
영	국	파	운 드	(GBP)	1627.79	1640.78	1647.84	1643.38
캐	나	다	달 러	(CAD)	948.20	955.60	958.25	953.54
홍	콩	달	러	(HKD)	166.54	167.10	167.47	166.00
중	국	원	(CNH)	181.61	182.04	182.54	180.74	180.91
유	로	화	(EUR)	1416.23	1424.76	1429.49	1422.88	1414.16
호	주	달	러	(AUD)	851.69	857.24	861.88	860.64
싱	가	폴	달 러	(SGD)	968.71	972.01	975.88	972.3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7.56	277.96	278.72	277.00

국내용역에 대한 해외업체 및 해외업체의 국내법인과 계약시 부가세처리여부

Q 국내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대해 해외업체와 그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에게 하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지만 해외업체와 하도계약시에는 용역(물품)의 수입으로 보고 인보이스를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거주자인 법인과 직접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금지급을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내법인에게 대금지급시에는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공급받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통한 대금지급을 하면 되며, 대금 지급시 어떤 통화로 지급할 것인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관련하여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저희 회사는 대학생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고용한 대학생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훈련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전담인력활동 수당(훈련비)을 회사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로 입금 받은 수당을 해당 학생이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입금하고 부서장은 해당 학생을 훈련하고 교육한 직원에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수당을 입금 받은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될까요?

A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화의 납품은 국내 업체로 하나 대금은 해외법인에서 수금하는 거래의 경우

Q 해외법인 B가 당사로 직접 발주를하고, 대금 또한 해외법인 B로부터 수금하는 거래이나, B 법인으로 직수출 하지 않고, 당사의 재화를 국내업체 A에 납품하여 A업체가 B법인으로 수출 하였습니다.

(재화의 흐름 : 당사 > A업체 > B법인)

이 과정에서 A업체와 당사와의 수수료 등 금전 거래는 없으며, 납품에 대한 증빙만 구비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러한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해외법인 B와의 결제대금이 US달러로 거래되기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가세 신고 시 해외법인 B와의 발주서와 외화입금 증명서 제출로 문제 없을까요?

질문3. 해당 거래는 전년도 발생한 매출 누락 건으로 당월 회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1. 귀사가 직수출하지 않고 A업체에게 공급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외법인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수출물품을 국내의 A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라면 A에게 공급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해외업체 A가 B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영세율입증사본으로 인정됩니다.
 3. 회계는 거래시점의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거래를 올해에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방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런 거래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보험료 환급

Q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용차량 보험료를 당해년도에 차량매각 후 해지하면서 발생한 보험료 환급분에 대해 비용 차감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전년도 비용이므로 당해년도 잡이익 처리할지 문의드립니다.

A 차량 매각하면서 발생된 보험료 환급분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자산에 있어 가치의 감소는 물질적 또는 물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경우는 손상과 변색 등의 물질적 원인에 의해서 자산가치가 감소하며, 건물·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은 실제 사용과 시간 경과에 의해서 가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의 감소가 없어도 유행에 뒤지거나 비효율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산의 진부화라고 한다.

급격한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근래에는 자산이 진부화되는 빈도수가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원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아예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유형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원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감액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액손실의 평가에 사용된 회수가능금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된다.

① 유형자산을 10만원에 취득시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100,000 대) 현금 100,000

②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회수가능금액이 6만원이 된 경우

차) 유형자산감액손실 40,000 대) 감액손실누계액 40,000

* 감액손실 = 장부가액 - 회수가능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회수가능금액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바, 기업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이를 부인하여 유보 처분하였다가 감액손실이 환입되거나 처분되었을 때 유보처분된

금액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도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에 한해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계상된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게 된다.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많은 사람들이 폐기와 처분에 대해 “폐기처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폐기 및 처분”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무상·회계상의 처리방법도 다르다.

즉, ‘폐기’라 함은 해당 유형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나, 아직까지는 기업의 내부에 해당 유형 자산을 소지한 상태이므로, 추후 매각 등의 경우에 대비해 비망가액을 남기는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진부화되어 ‘폐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중 비망가액(1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폐기손실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9,999,000(비망가액 1천원 남기고 장부에서 없앴)
유형자산폐기손실 1,999,000

유형자산을 폐기,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취득원가, 총당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추후 해당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시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유형자산이 진부화 되어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이란 해당 자산을 유·무상으로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폐기와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와, ② 폐기되어 장부상 비망가액만 남겨져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유형자산의 폐기와 똑같이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데 이때에는 비망가액은 남기지 않는다.

또한 폐기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폐기손실, 처분손실 등의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된다.

물론, 유형자산의 처분이나 영구적 폐기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자산의 처분일이나 영구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사례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례1]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처분(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2,000,000		

[사례2]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1백만원에 매각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	1,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사례3] 이미 폐기되어 비망가액만 남아 있는 자산의 소각(폐기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대) 유형자산	1,000
-------------	-------	---------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2025년 시행으로 늦춰진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과세 대상

- 연간 5000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지수펀드 등)
-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기타 금융투자소득
(채권,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

세율(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

과세방법

반기마다 원천징수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정책명	지원내용
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1 매칭
내일채움공제	2년간 400만원 저축 시, 정부와 기업이 1:1:1 매칭
희망적금	5년간 720만원 저축 시 정부와 기업이 1:1.5:1.67 매칭
도약계좌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 최대 6% 매칭
소득공제 장기펀드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 인하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022년 (일반 1~2주택)	2023년 (2주택 이하)	2022년 (3주택 이상, 조정 2주택)	20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2%
50억원 이하		1.5%		3%
94억원 이하	2.2%	2%	5%	4%
94억원 초과	3%	2.7%	6%	5%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개선안

구분	면세점 조정(안)	중부세(과표 · 세율 조정안)
종합합산	• 5억원 → 3억원(또는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억원 이하 1% → 5억원 이하 1% • 15~45억원 이하 2% → 5~30억원 3% • 45억원 초과 3% → 30억원 초과 5%
별도합산	• 80억원 → 40억원(또는 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억원 이하 0.5% → 50억원 이하 0.5% • 200억~400억원 0.6% → 50~200억원 1% • 400억원 초과 0.7% → 200억원 초과 1.5%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별도합산 전환 또는 분리과세 과세전환)	• 과세제외 → (별도합산에 준해 추가과세 검토)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마라

웬만한 유명 브랜드가 아니면 발붙이기 힘든 강남에서도 최고 브랜드로 꼽히는 김영모과자점의 김영모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과자점을 낸 사람이다. 고등학교 중퇴 후 17세에 경북의 한 빵집에서 보조로 일하며 제과업과 인연을 맺은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모두 자는 동안에 혼자 연습을 했고, 군대에 가서는 손기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볼펜을 버터크림 주머니 삼아 꾸준히 연습을 했다. 또 빵에 관한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제과기술자가 있는 제과점의 보조로 들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다.

자신의 가게를 낸 후에도 최고를 향한 그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직원들이 크리스마스용 케이크를 잘못 보관해 냄새가 배자 무려 4백 개를 모두 버렸고, 재료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빵을 만든 적도 있었다. 또 좋은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들이기 위해 당시 아파트 세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최고를 향한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국내 유수의 제과점을 물리치고 강남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요즘은 사람도, 기업도, 나라도 최고를 지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히딩크 감독의 만류와 네덜란드인의 사랑을 뒤로 하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박지성,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메이저리거가 된 박찬호, 초일류기업을 표방하며 제품도, 기술도 아닌 표준을 팔기 위해 발빠르게 뛰는 기업들, 모두 최고를 향해 달리기 위해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최신 판례예규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제과-58, 2023.01.27

질 의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회 신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 중 신탁재산 처분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서면국제세원-3195, 2023.03.17

질 의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의 개인주주 자신에게는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기준법무재산-71, 2023.04.28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행 2019.01.01.] [2018.12.31-16102호]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9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2020.1.1., 2019.12.31.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059, 2023.05.30

■ 질 의

- 질의법인은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함(법인법 24②(1))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음

질의

-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례(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사전법규부가-310, 2023.05.24

■ 질 의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종부세 50만명에 4조7천억 고지... 작년보다 78만명2조원 감소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 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 50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세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인원, 세액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납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분납 조건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며 분납기한은 2024년 6월 17일까지다.

올해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가운데 종부세가 100만원이 넘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15일까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올해 종부세 달라진 세법... 다주택자일수록 꼼꼼한 체크 필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기본공제 상향에 이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고, 12억원을 초과해도 세율 27% 아래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훨씬 여유로워졌다.

3주택자는 중과세율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구간별로 거의 1%씩 세율이 줄어들었고, 세 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괄 적용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공동명의 주택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300%를 적용하던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도 150% 일괄 하향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이 포함됐다.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면서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한다.

조세소위, 기업승계 증여세 완화 합의... 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혼 부부 증여세 공제한도는 결혼 시 1인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혼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아는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도 추가했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가구에도 똑같이 적용 될 방침이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3. 11

-
- (납부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입니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 증여 ·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 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 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납부 개요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원

-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 명(세액 1.5조)과 토지분 11만 명(세액 3.2조), 총 50만 명(세액 4.7조)에게 11.23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 분	인원(천 명)			세액(조 원)		
	'22년	'23년	증감	'22년	'23년	증감
주택분	1,195	412	△783 △65.5%	3.3	1.5	△1.8 △54.9%
토지분	115	106	△9 △7.9%	3.4	3.2	△0.2 △4.9%
합 계	1,283	499	△784 △61.1%	6.7	4.7	△2.0 △29.4%

※ '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3.12.15.(금)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 신청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6.17.(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3.12.15.까지 납부할 금액	'24.6.17.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금)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4.6.17.(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홈택스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23년 기준 연 2.9%)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납부

- ☐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 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국번 없이 ☎ 126 (ARS-1번-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ARS-2번-1번)

참고 1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년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년	'23년	'22년	'23년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 원	80억 원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동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년	'23년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구분	'22년	'23년
지방 저가주택 범위	·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內 읍·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추가) 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분	'22년	'23년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추가신설) ·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구분	과세 여부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참고 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 원)	5억 원	80억 원																																																																				
x	x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10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x																																																																						
세 율(%)	<table><tr><th rowspan="2">과세표준</th><th colspan="2">2주택 이하</th><th colspan="2">3주택 이상</th></tr><tr><th>세율</th><th>누진 공제</th><th>세율</th><th>누진 공제</th></tr><tr><td>3억 원 이하</td><td>0.5</td><td>-</td><td>0.5</td><td>-</td></tr><tr><td>6억 원 이하</td><td>0.7</td><td>60만 원</td><td>0.7</td><td>60만 원</td></tr><tr><td>12억 원 이하</td><td>1.0</td><td>240만 원</td><td>1.0</td><td>240만 원</td></tr><tr><td>25억 원 이하</td><td>1.3</td><td>600만 원</td><td>2.0</td><td>1,440만 원</td></tr><tr><td>50억 원 이하</td><td>1.5</td><td>1,100만 원</td><td>3.0</td><td>3,940만 원</td></tr><tr><td>94억 원 이하</td><td>2.0</td><td>3,600만 원</td><td>4.0</td><td>8,940만 원</td></tr><tr><td>94억 원 초과</td><td>2.7</td><td>10,180만 원</td><td>5.0</td><td>18,340만 원</td></tr></table>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 원 이하	0.5	-	0.5	-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1.0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2.0	1,44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3.0	3,94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00만 원	4.0	8,94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 원	5.0	18,340만 원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h>누진 공제</th></tr><tr><td>15억 원 이하</td><td>1.0</td><td>-</td></tr><tr><td>45억 원 이하</td><td>2.0</td><td>1,500만 원</td></tr><tr><td>45억 원 초과</td><td>3.0</td><td>6,000만 원</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5억 원 이하	1.0	-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h>누진 공제</th></tr><tr><td>200억 원 이하</td><td>0.5</td><td>-</td></tr><tr><td>400억 원 이하</td><td>0.6</td><td>2,000만 원</td></tr><tr><td>400억 원 초과</td><td>0.7</td><td>6,000만 원</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 원 이하	0.5	-	0.5	-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1.0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2.0	1,44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3.0	3,94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00만 원	4.0	8,94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 원	5.0	18,340만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5억 원 이하	1.0	-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	=																																																																						
종합부동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세 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X 150%]을 초과하는 세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참고 3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 원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10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2.7	5.0	15억 원 이하	1.0	-	200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25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94억 원 초과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해당없음		150% ☞ 과세대상 유형별(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참고 4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 올해는 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또한,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수도권 내 연천·강화·옹진 추가)되었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이 완화(2년 → 3년)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되었습니다.

**Q5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적용 주택 수 계산 사례 >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 서울 주택 2호*, 강원 1호 *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 부산 주택 2호 ·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Q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종부세액 합계액 (재산세 + 종부세)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종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 + 종부세) × 150%

Q7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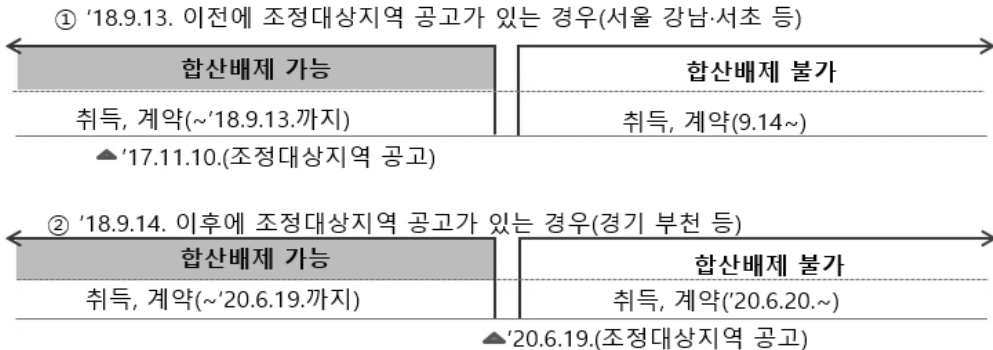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 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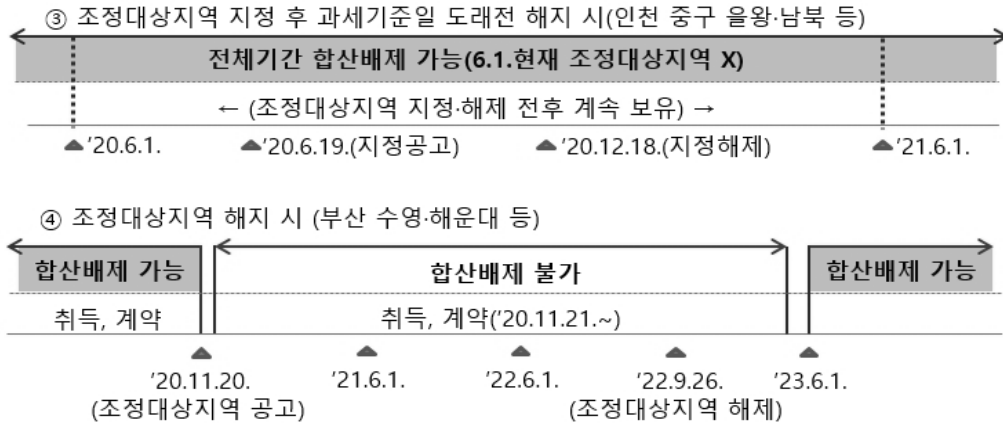
Q8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됩니다.
- 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Q10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Q11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 ☐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Q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된 경우는?

- ☐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3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Q1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5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 ☐ 다만, 올해부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6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7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8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Q19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2.(화))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Q20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

*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Q21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22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Q23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4 고지세액을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Q25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 국세청, 2023. 11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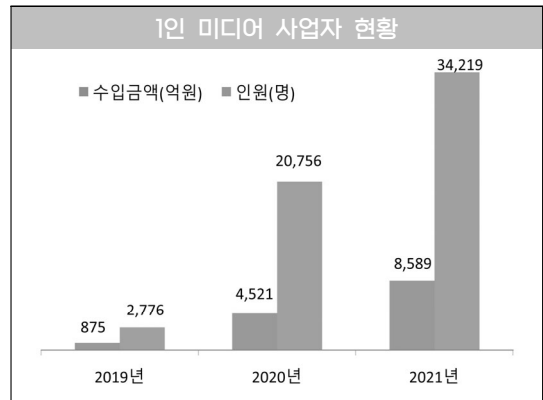
- ◆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 ◆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 ◆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추진성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합니다.
 -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재산·소득 변동내역과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능적 강제징수 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중점 추진사항

- 이번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62명입니다.
- 먼저,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



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하여,

-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산추적조사 대상 |

- ①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은닉 체납자 (224명)
 - 체납 발생 전·후 증여, 부동산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
- ②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③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3

주요 추진사례

추적조사* 사례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강제징수 과정

추적사례 ①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p>■ A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하여 재산은닉</p> <p>⇒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p>	

추적사례 ②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p>■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강제징수 회피</p> <p>⇒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p>	

추적사례 ③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p>■ C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p> <p>⇒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 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p>	

추적사례 ④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p>■ D는 유튜버로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p> <p>⇒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예정</p>	

추적사례 ⑤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p>■ E는 법무사로 수입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여 강제징수 회피</p> <p>⇒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청구소송 제기</p>	

수색* 사례

*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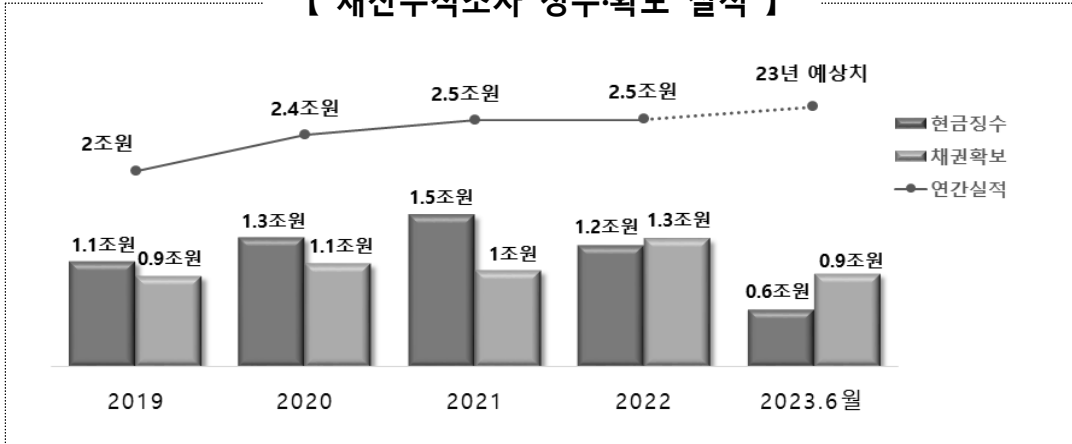


수색사례 ①	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원 징수
<p>■ 체납자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재산을 은닉</p> <p>⇒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집행 전 개문을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 발견하여 6억원 징수</p>	
수색사례 ②	위장이혼한 배우자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차량 2억원 징수
<p>■ 체납자는 건설업자로 매출누락에 대한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 후 무납부하고, 체납 직후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은닉</p> <p>⇒ 체납자가 前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여 수색,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압류·공매하여 총 2억원 징수</p>	
수색사례 ③	자해, 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p>■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p> <p>⇒ 수차례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p>	

4 추진성과

-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23년 상반기 총 1조 5,457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하였습니다.

【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납자 253명에 대하여 채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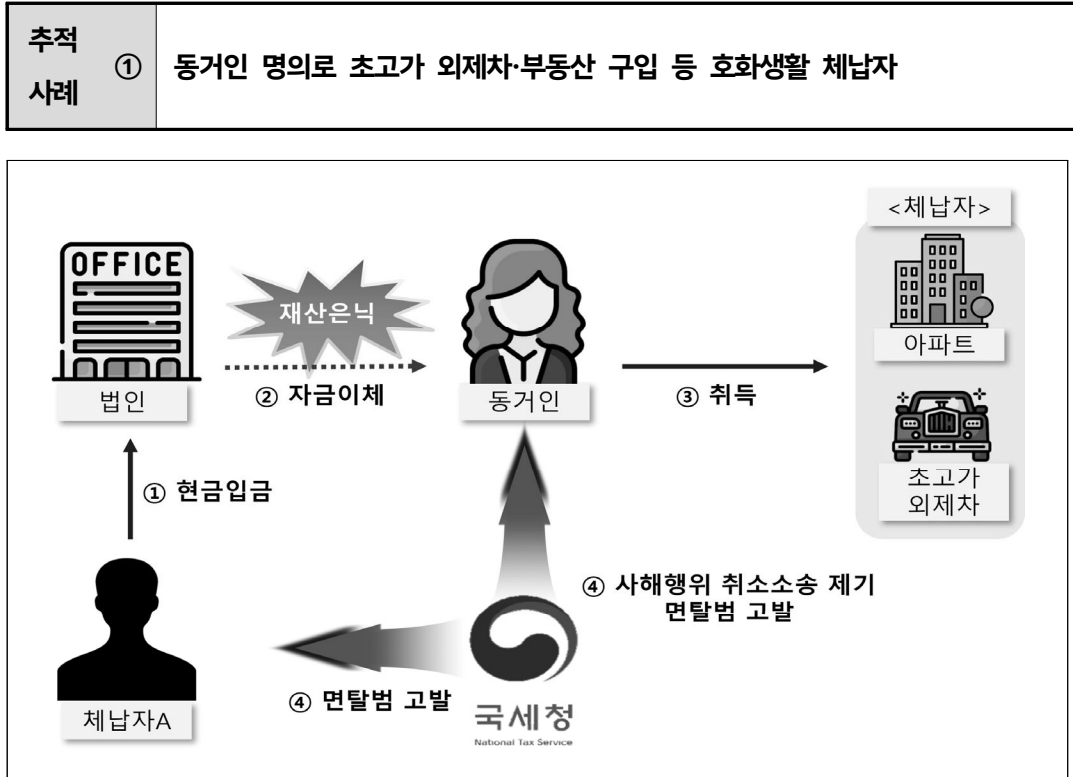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채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채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고액·상습 채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채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채납자 등 명단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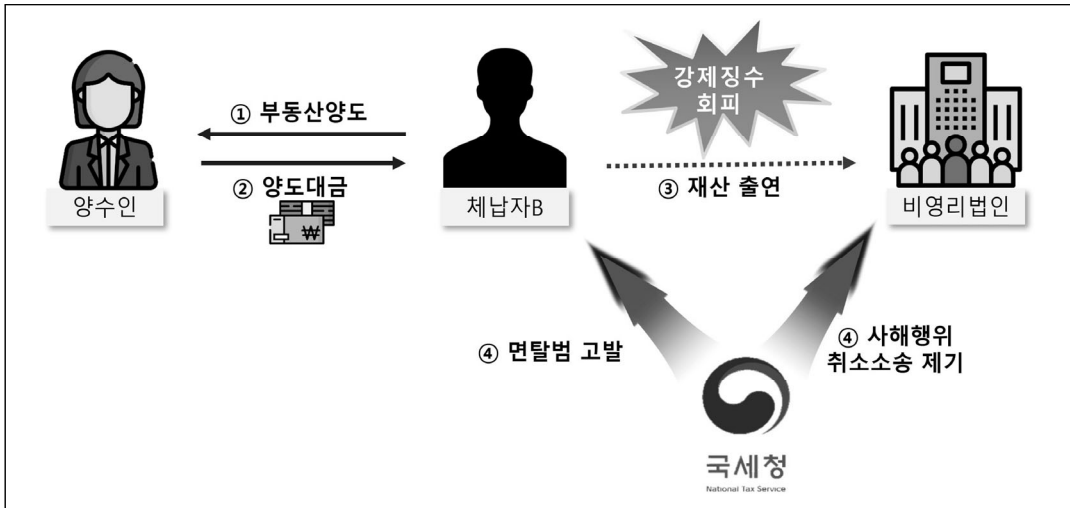
붙임 1 - 주요 추진사례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
 - 동거인에게 은닉한 재산으로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아파트)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재산추적조사 방향
- 동거인 명의로 은닉한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을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②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채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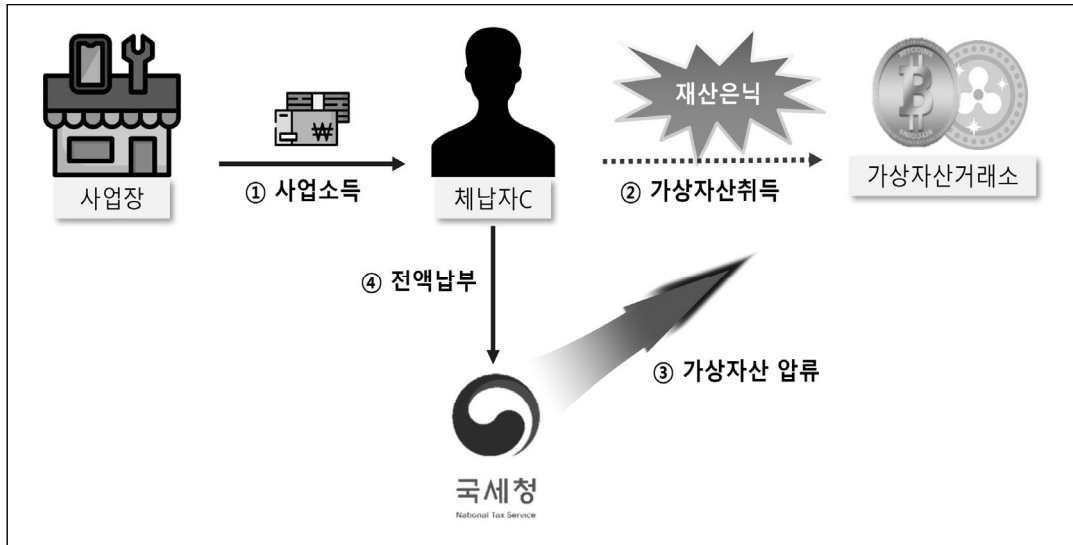


- 채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채납
 - B는 본인이 소유하던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하는 등 납부여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채납
 - B는 고액 양도소득세 채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예상하고 양도 직후, 본인의 전 재산(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강제징수 회피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채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채납자가 출연한 재산(부동산 양도대금 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채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채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③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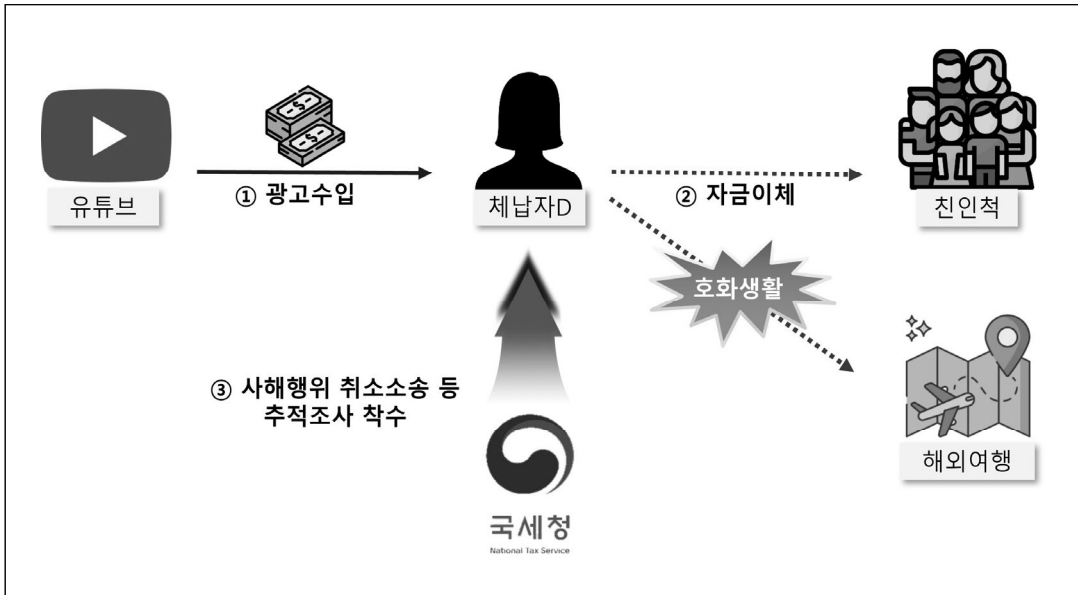
- 휴대폰 판매업자 C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
- C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 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 · 시세)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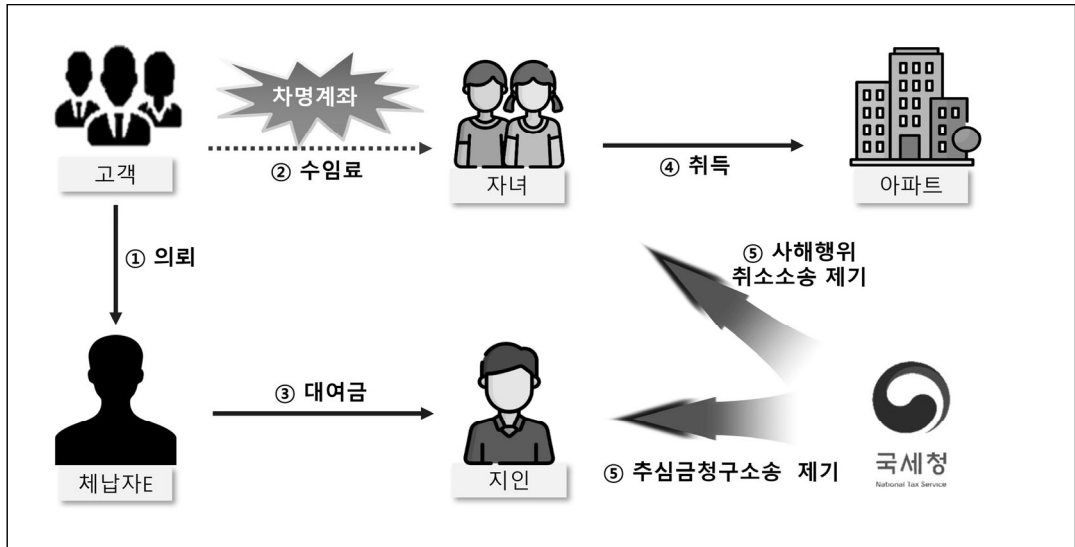
추적
사례

④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D는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임
 - 체납자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하였으며,
 - 수취한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예정

추적 사례 ⑤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 체납자는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입료를 받아서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의 부동산(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와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은 가압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 국세청, 2023. 11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꾸준히 공개
 - 금번 '22년도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2년간('11년~'22년) 지적사례 총 141건을 공개*
 - * 작년까지는 감리 지적사례만 공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하여 공개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사실관계, 지적근거 등을 상세히 제공
 - *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311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00지적사례고유번호
 - 사례별로 ❶ 회사의 회계처리, ❷ 회계기준 위반내용, ❸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❹ 감사절차 미흡사항, ❺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을 제고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2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이며,
 -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2건 등으로 구성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건)

공개 시기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22년	'21년	'11년 ~ '14년	'20년	'15년 ~ '17년	'18년 ~ '19년	'11년 ~ '22년
지 적 유 형	❶ 매출·매출원가	3	4	4	5	12	4	32
	❷ 투자주식	4	3	4	5	6	4	26
	❸ 재고 및 유·무형자산	3	3	-	1	5	7	19
	❹ 기타자산·부채	5	2	8	2	5	7	29
	❺ 주식미기재 등	3	3	11	2	9	7	35
공개사례 수(합계)		18	15	27	15	37	29	141

【참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요약)

◇ 매출·매출원가

-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

◇ 재고자산

-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 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

【참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요약)_계속

◇ 이연법인세부채

-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 이연법인세부채

-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

- E사는 거래처인 F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F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3

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 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 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아울러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붙임 1 -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① 매출·매출원가(3건)

1. FSS/2311-01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2. FSS/2311-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3. FSS/2311-03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② 투자주식(4건)

1. FSS/2311-04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2. FSS/2311-0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3. FSS/2311-06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4. FSS/2311-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③ 재고·유형자산(3건)

1. FSS/2311-08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2. FSS/2311-09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3.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④ 기타 자산·부채(5건)

1. FSS/2311-11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2.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3.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4. FSS/2311-14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5. FSS/2311-15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⑤ 주식미기재 등(3건)

1. FSS/2311-16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2. FSS/2311-17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3. FSS/2311-18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